NEWS & NEWS

치협 2만여 회원 ·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의학 교수 3년마다 구강검진 반대 건의서 채택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

치협 2만여 회원과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의학 교수들은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재추진키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반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각 위원, 보건복지위원장 및 각 위원, 경실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 관련 단체에 7월 8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동 사안을 지난 2002년 16대 국회 때도 입법 추진코자 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입법으로 17대 국회를 통해 또 다시 개악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치아우식증은 우리 나라 초·중등학생 중 76%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며 평균 3.25개의 충치를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구강검진을 조기에 실시, 발견해 조기치료를 유도 할 수 있는 항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치아 우식증은 6개월 정도 경과되면 새로 발생될 수 있고 1년 이상 방치했을 경우 치수에까지 영향을 미쳐 커다란 통증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부담이 국민 개인에게 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만큼 구강검진은 매년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시진(視診)구강검진은 매년 실시토록 해야 하며 초등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에 대해서는 시진 구강검진과 더불어 파노라마 악골 촬영이 함께 이뤄져 악골내 병변을 사전에 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 7조2항에 의거 학교에 출장해 구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는 검진기관(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기관)은 전국 1만1,906개 치과의료기관중 약 7%인 800여개에 불과, 전국 초·중·고등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계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 의결되자 전국 지부장 및 대한구강보건협회장, 대한구강보건학회장 등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11개 치과대학 예방치의학 교수들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년에 한번 구강검진 문제 많다" 부당성 알리기 나섰다 이병준 치무, 보건복지위 · 교육위 관계자 등 면담

치협은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재추진키로 의결된 것과 관련 치협 2만여 회원과 전국 11개 치대 예방치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반대 건의서를 채택한데 이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7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방문, 관련 담당자들을 면담한 가운데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은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 학교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변경 실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법률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 치무이사는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예방 우선의 치과검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의과쪽 검진의 논리와 동일시 한 것"이라고 강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위 및 교육위 담당자들은 "구강검진 주기를 3년 주기로 개정하려는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을 제출한 교육부에 의견을 들어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일단 개정안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치대 입학정원 감축 촉구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등 치과계 현안 강조
정 협회장, 이기우 열린우리당 간사와 면담

정재규 협회장은 7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과 상견례를 갖고 ▲치대입학 정원 감축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 등 치과계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김대중 정부시절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과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도 과잉이어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의과는 현재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 치과는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해결토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현재 치과 개원가는 치위생사 인력이 모자라는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배출된 치위생사들이 조기에 그만두는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치위생사 입학정원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협회장은 "치과는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구강보건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을 위해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급여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많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국회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의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 정책홍보를 적극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야가 넓은 정치인 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 단체인 보건의료계 협회에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수원 권선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39세의 젊은 의원임에도 불구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수원시민광장 사무국장, 5대 경기도 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 여당내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정치인이다.

대북의료지원 방안 다각 검토
정기이사회, 전문의 관련 규정 신중 논의

치협은 지난 5월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방북단에게 북한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평양 국제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속력을 내기로 했다.

치협은 7월 13일 협회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북한측이 요청해 온 구강설비, 소공기구 및 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따르고 치과기자재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구축과 약속이행이 중요한 만큼 다각도로 노력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와 관련 "남북치과단체의 상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검토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힘들더라도 의지를 갖고 하자"고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와 이사들을 독려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과 관련, 치과전문과목 중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에 한해 현행 수련병원 이외에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에서 수련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치과병원협회는 찬성입장을, 해당 2개 학회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이 상충돼 있고 미묘한 사안이므로 해당 학회와 치과병원협회가 의견을 합의해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권고키로 했다.